

DMZ, 평화지대 앞에 지뢰·방역 공동과제 '산더미'

[조재영 기자]

동영상 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평화지대로 다시 태어날 DMZ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시리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제 보도해 드린 독일 사례에서 배웠지만 DMZ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현실 상황은 좀 복잡한데요.

조재영 기자가 고민해 봤습니다.

◀ 리포트 ▶

황톳빛의 민둥산.

숲은커녕 나무도 없는 땅에 잡초만 무성하고 산사태 흔적까지 뚜렷합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마구잡이 벌목이 횡행하면서 DMZ 주변 사정만 봐도 남북한 산림의 규모가 판이합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비가 내리면 삼시간에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토사도 유실되고 북한이 저걸 저대로 두면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간 불균형은 또 있습니다.

남한에선 한 동안 자취를 감췄던 말라리아.

그런데 북측 DMZ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북측의 허술한 방역망을 뚫고 남쪽으로 번진 탓에 지난해만 북측에서 4천여 명, 남측 접경지역에서도 400여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DMZ를 겨누는 방역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성자/경기북부청 질병관리팀장]

"북한 쪽의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시, 군이랑 함께 합동방역을 한다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북에서 시작해 DMZ를 관통,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 같은 이른바 "공유하천" 역시 남북 공동관리가 시급합니다.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방류하면서 남측에서 6명이 숨진 것처럼 북한이 유량을 일방 통제 하면 피해는 하류지역 남한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장석환/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한 번도 협의가 되거나, 제대로 물관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수계실무위원회라든지 공동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DMZ 최대 난제는 지뢰입니다.

최대 수백만 개로 추정만 될 뿐 매설 지도도 없고 수십 년간 빗물과 토사 유실로 계속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땅의) 표피를 상당 부분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DMZ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DMZ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최소한의 이동 통로만 지뢰를 제거하고 나머진 손을 대기도 힘들 거란 얘깁니다.

또 DMZ 내 토지의 44%는 주인을 알 수 없어 향후 소유권 갈등도 적잖이 예상됩니다.

DMZ의 앞날에 현실의 난제는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평화지대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